

해외단신

(일반)

작년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 최고

지난해 전세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된 금액은 300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산업 전체 투자액의 20~25%를 차지했다고 국제 환경단체 월드워치 연구소(WI)가 6일 발표했다. WI는 6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국제 재생가능 에너지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의 지원과 민간 부문 투자 증가로 이처럼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태양열 발전 기술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WI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정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4개 개도국을 포함, 최소한 48개국이 이런 정책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교토기후협약 1단계가 만료되는 2012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5~3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교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제한치 적용에서 면제됐지만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0분의1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37기가와트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으로 독일과 미국, 스페인,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WI에 따르면 지난 2000~2004년 사이 전세계의 태양열 발전 능력은 재생가능 에너지 중 가장 큰 60% 폭

으로 증가, 일본과 독일, 미국 등 태양열 선도국에서 4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향상과 생산 규모 증가로 인해 이런 기술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WI 보고서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 비용은 10~15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많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은 재래식 발전 기술과 소매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상황만 좋으면 도매 가격에서까지 경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탕수수과 밀짚, 폐식용유 등 농산물 연료를 사용한 발전량은 전세계 석유 소비량의 3%인 330억 ℓ 상당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LNG시장 급팽창

LNG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조사회사인 톰슨파이낸셜의 추정에 따르면 계획중인 새로운 프로젝트가 모두 완성될 경우 LNG의 연간 생산량은 현재의 1억4500만톤에서 약 3배 가량 증가한다는 것이다.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천연가스와 원유의 가격을 사상최고치까지 올려놓은 왕성한 에너지수요다. 미국에서는 천연가스가 가격이 최근 3년간 3배 넘게 인상됐다. LNG 시장은 전통적으로 주된 고객이 국내 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그 고객기반은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의 감소에 의해 수입이 늘어나고 새로운 대량소비국으로서 중국과 인도 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의 소비지는 가스전에서 멀리 떨

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량이 늘어나면 관련시설의 건설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에는 지금까지 LNG터미널이 4개소 밖에 없었지만 수요가 많아져 30개소의 신설이 계획중에 있다.

석유메이저인 영국의 BP와 미국의 엑슨모빌 등은 전부 자기 자금으로 건설자금을 충당하지만 나이지리아, 적도기니아, 페루, 인도네시아, 카타르, 예멘 등 생산국의 에너지기업은 대규모 외부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때문에 LNG관련 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은행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분야의 용자에 미국의 씨티그룹, 프랑스 소시에테 제너럴, 스위스 UBS, 영국 로열 뱅크 스코틀랜드 등 세계 대금융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미·일·중,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착수

미국, 일본, 중국이 가스(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미국은 총 330만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200만달러를 지원하고, 스탠포드대학·텍사스주립대학·우주흡해양연구소 등 5개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알래스카 등지에서 2~3년에 걸쳐 가스(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자원규모·회수가능성·안전성·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미국 내 부존량이 천연가스 5600조 m^3 와 맞먹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01년 7월 수립된 기초연구(2001~2006년)·시추조사(2007~2011년)·상업화 대비 기술정비(2012~16년) 등 3단계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제반 탐사 활동도 진행 중에 있다. 일본 내 부존량은 7조4000만 m^3 로 일본의 연간 가스 소비량

의 100년분에 해당한다.

중국도 그간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중국해에서 메탄가스 80% 이상이 응고된 '가연성 얼음(가연빙)'에 대한 첫 시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중국은 1999년부터 연구를 시작, 작년에는 독일과 공동연구팀을 발족하기도 했으며 동·남중국해 대륙붕과 남사군도 등지에서 가연성 얼음을 발견한 바 있다.

IAEA, 이란 핵문제 러시아 중재안 수용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서방 외교 소식통들이 24일 밝혔다. IAEA 이사국들은 이란 내에서 IAEA 사찰하에 우라늄 변환 작업은 허용하고 변환된 우라늄은 러시아로 보내 농축하는 러시아 측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데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IAEA 외교관들이 전했다. IAEA 이사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이란 핵문제 협상 대표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런 입장이 담긴 성명 초안을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IAEA 이사국들이 러시아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이란 내에서는 어떤 형태의 우라늄 농축 행위도 불허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장 성명 초안에는 미국과 EU가 지난 수개월간 추진해 온 이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언급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중재안은 EU 뿐 아니라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이란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IAEA 이사회에 참석한 이란 대표도 러시아 중재안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지역)**동아시아 지역주의로 경제협력 저해 우려**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역내의 지역주의 확산이 외환위기 이후 발전해 온 동아시아 금융협력 관계를 저해하고 동아시아 시장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치경제적 평가' 보고서를 내고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 보다는 경쟁적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계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추세로 볼 때 향후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참여하게 될 양자간 FTA는 다양한 형태를 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수의 양자간 FTA가 역내에서 동시에 체결될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체 구축(예를 들면 동아시아 FTA)은 지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아세안+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에서 양자간 FTA에 대한 논의비중이 커지면서 금융분야 등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측면이 있고 광범위한 무역자유화의 예외가 허용되는 형태의 FTA 체결이 잇따르면 금융분야 협력에서도 예외를 주장하게 돼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분야 협력이 퇴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지역주의를 추구할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더 악화되고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따라 양자간 FTA로 상징되는 지역주의는 동아시아를 통합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조

장할 우려가 있어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범지역적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FTA 중 상당수가 관세철폐 범위나 원산지 규정 등을 기준으로 한 시장개방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동아시아 전체의 시장통합, 즉 범 동아시아 FTA를 목표로 한 아세안+한중일 3국의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태 기후협약 6개국 협의체 첫 회담 1월 열릴 듯

아시아·태평양 기후협약 6개국 협의체 첫 회담이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릴 것이라고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이 1일 밝혔다. 다우너 외무장관은 이날 캔버라에 있는 호주 의회에 출석해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태 기후협약 첫 회담에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도 공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의정서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기후협약 6개국 협의체에는 한국을 비롯, 미국과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협약을 위한 6개국 협의체 회담은 지난 7월 발표돼 11월에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었다. 협의체는 6개국이 기술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교토의정서와 달리 온실가스 방출 감소의 의무화를 표방하고 있다.

중-투르크메니스탄 내년 대규모 가스계약 체결

투르크메니스탄은 내년 초 중국과 천연가스 판매 및 공동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가스계약을 체결한

다고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23일 밝혔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교통부 관계자에게 이같이 밝히고 계약 내용중 양국이 공동 개발하려는 가스전이 위치한 동부 투르크와 중국을 잇는 가스 수송관 건설 문제가 포함돼 있고 이 가스관을 통해 연간 300억m³의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7월 투르크와 유류 및 가스부문 협력계약을 체결했으며 유전 및 가스전 개발 등을 위해 투르크에 2천400만달러의 차관을 저금리로 빌려줬다. 니야조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니야조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밀린 가스대금을 지불해주지 않을 경우 두 나라와의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나온 것이다. 천연가스의 약45%를 투르크에 의존해 온 우크라이나는 각각 2006년까지 약390억m³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는 약70억m³의 천연가스를 각각 구입할 계획이다.

中, 올해 원유수입증가율 5.9%로 둔화 예상

중국의 올해 원유수입 증가율이 5.9%를 기록해 지난해의 35%보다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쑤딩밍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에너지국 국장이 14일 말했다. 쑤 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컨퍼런스에서 “중국은 올해 1억3천만t의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액 규모로는 올들어 현재까지 원유수입액이 3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쑤 국장은 “중국은 경제성장을 증진을 위해 여전히 원유수입이 필요하다”며 “고유가 환경에서 중국의 원유수입액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석유수요 증가율 둔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사회를 건설하려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中, 내년 대체에너지원 ‘타는 얼음’ 시추

중국은 내년부터 남중국해상에서 대체 에너지원인 ‘가연성 얼음(可燃冰)’ 채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14일 중국 당국이 그동안 남중국해 지역에서 가연성 얼음 매장량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거쳐 내년께 첫 시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양의 깊은 암석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의 수용성 화합물인 ‘가연성 얼음’은 표면은 얼음과 비슷하며 성분의 80~99.9%가 가연성의 메탄가스로 50년 내 석유 채굴이 바닥난 이후 가장 이상적인 대체 에너지원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매장된 가연성 얼음의 에너지 보유량이 지금까지 알려진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9년부터 가연성 얼음에 대한 연구를 시작, 홍콩 바로 밑의 남중국해 북부 대륙붕과 난사(南沙)군도 일원, 동중국해 대륙붕 등 3곳에서 가연성 얼음을 발견했다. 칭하이(青海)와 티베트 사이의 고원 분지의 동토지대에서도 대량의 가연성 얼음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경제 급성장과 함께 에너지난이 심각해지자 수년 전부터 석유 확보, 유전개발 등에 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대체에너지원 확보에도 깊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中 정부, 에너지가격 결정 자유화 고려중

중국정부가 에너지가격 결정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차이나테일리가 14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세금과 규제들이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맞물리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치고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차이나테일리는 전했다. 이 매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자오 샤오팡 이사의 말을 인용, 정부가 석유와 석탄 등 제품의 가격을

국내외 뉴스

곧 자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 이사는 규제철폐가 부동산을 비롯한 물, 전기, 가스와 그 외 자원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유 등 자원의 정부의 개입을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석유 확인 매장량 240억t

중국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2004년 말 현재 원유와 액화유를 통틀어 248억4천400만에 이른다고 신화통신이 국토자원부 통계를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국토자원부 정보센터 세계자원전략연구개발실협실의 장신안(張新安) 부주임은 10일 '2005 중국석유포럼'에서, 중국의 이같은 확인 석유 매장량이 2003년 말에 비해 5.4%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주임은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매장량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67.91억t이며 그 가운데 이미 채굴된 석유량은 43억t, 남은 채굴 가능 석유량이 24억9천만t으로서 2.4%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석유자원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채굴량과 소비의 비중이 매장량의 비중에 비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같은 시기 중국의 석유 매장량은 전세계의 1.5%에 불과하지만 생산량은 4.5%, 소비량은 8.2%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석유생산량은 2000년 1억6천300만t이던 것이 2004년에는 1억7천500만t으로 1.1% 증가했으며 올해 생산량은 1억8천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전에는 2010년에 가서야 1억8천만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었다. 장 부주임은 중국의 유혈암(油頁巖) 자원 총량이 4천832억t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매장 확인율이 6%에 불과한 실정이며, 유사(油砂)에 대한 자원 매장량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80억t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

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억2천만t의 원유를 수입했고 올해는 이보다 1천만t 늘어난 1억3천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도, 풍력에너지 생산량 3년만에 4배 증가

인도의 풍력에너지 생산량이 최근 3년 사이 4배로 늘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인도 대체에너지부는 성명에서 "전국 풍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올 상반기에 632mw 추가되면서 총 4천228mw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은 "정부는 풍력 발전량을 1만5천62mw로 늘리기 위해 97개의 발전소 부지선정에 관한 마스터 플랜도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0%를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 가운데 바이오 디젤이나 에탄올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원유 수입에 270억달러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계속되는 고유가로 올해는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 윈드와 독일의 에너콘, 덴마크의 베스타스와 NEG 미콘 등 풍력 메이저들은 발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근 인도에서 제조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인도는 현재 세계 4위의 풍력에너지 생산국이다.

베트남, 석유제품 수입관세 인상

베트남이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인상했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17일 재무부(MOF)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9일부터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0%에서 5%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VNA는 이는 국제유가가 지난달말 현재 배럴당 평균 58달러로 예전의 65달러보다 7달러가 인하된 데다

해외로부터의 석유제품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취해졌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근국가들에 비해서는 석유제품류 수입관세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베트남에 수입된 석유제품류는 모두 960만t에 42억달러 규모로 물량과 금액상으로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4.7%와 4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기간 베트남의 원유수출실적은 1천500만t에 62억달러 규모로 물량면에서는 작년동기대비 7.2% 감소했으나 금액상으로는 오히려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은 석유제품 수입을 줄이기 위해 중부 다낭 시 외곽의 중귀 지역에 연산 650만t 규모의 정유시설을 건설 중이다. 이 정유시설은 오는 2008년말이나 2009년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베트남, 2007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베트남이 대기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한다. 베트남 일간신문 탕니엔(청년)은 31일 중앙 자동차등록처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007년 7월1일부터 유럽 기준에 맞춘 자동차배출가스 억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유로 2'(Euro 2)로 알려진 이 기준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신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휘발유와 디젤유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 진출한 GM대우(비담코), 도요타, 포드 등 12개 외국계 자동차 조립업체들은 모두 '유로 2' 배출가스 기준에 합당한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유로 2' 기준

을 자동차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 품질이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데다 기준에 운행되는 노후 자동차가 워낙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연기했었다고 탕니엔은 보도했다. 한편 현재 베트남의 자동차 운행대수는 300여 만대로 이 가운데 50% 이상이 노후화돼 대기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왔다. '유로 2'는 휘발유 및 경유의 유황 함유량을 500ppm 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대다수 국가들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유입국' 계획 10년만에 구체화

아시아권 6위 산유국인 베트남의 '정유입국' 10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 중부 다낭 외곽의 중귀(Dung Quat) 지역에 연산 650만t 규모의 첫 정유공장이 28일 착공됐기 때문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응웬 쩐 중 수석부총리(경제담당)는 연설을 통해 "10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제1 정유소 건설계획이 시작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 계획은 중부 지역의 낙후된 경제재건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로, 항만 등 인프라시설 구축을 포함해 모두 25억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이 계획은 지난 5월 프랑스의 테크넵(Technip Conflexip)을 중간사로 하는 국제컨소시엄과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공사(페트로베트남)측이 건설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만에 본격화되는 셈이다. 제1 정유소의 공기는 44개월 가량으로 오는 200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 산유국이며 정유시설이 없어 석유제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를 시행하는 국제컨소시엄에는 테크넵 외에도 일본의 JGC와 스페인의 테크니가스 레

우니다스가 참여 중이다.

제1 정유소 건설계획이 처음 확정된 것은 IMF 외환 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 당시 베트남 정부는 13억달러 규모의 제1 정유공장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시공 경험과 자금 능력이 있는 해외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한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의 관련업체들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투자 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시한 업체는 프랑스의 토탈(Total). 토탈은 정유공장을 여건이 열악한 중퐁 지역보다는 유전에 가깝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남부 바리아-붕타우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낙후된 중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고수하자 토탈측은 “경제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 의향을 공식 철회했다.

이후 한국의 LG그룹,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등도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다. 건설계획이 계속 난항을 빚자 베트남 정부는 2002년 4월 테크닉을 주간사로 하는 국제컨소시엄과 장비구매 및 건설(EPC) 계약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컨소시엄측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비용이 그동안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13억달러로는 효과적인 계획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베트남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측은 예산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버텨 건설계획은 결국 2005년으로 지연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페트로베트남측의 최고경영진이 문책을 당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베트남측은 더 이상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결국 국제컨소시엄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베트남은 작년 2천10만t의 원유를 생산해 아시아권 산유국들 가

운데 6위를 차지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

OPEC, 배럴당 50달러 사수위해 감산할 수도

석유수출기구(OPEC)는 배럴당 50달러를 사수하기 위해 감산을 해야만 할 수도 있다고 원유 컨설팅업체인 세계에너지연구센터(CGES)가 22일 전망했다. CGES는 이날 월간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원유 수요가 대폭적으로 반등하지 않는다면 OPEC는 내년에 유가를 방어하기 위해 감산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CGES는 OPEC내에서 매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배럴당 50달러를 방어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OPEC는 내달 12일 쿠웨이트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라크, 러시아와 석유산업 협력 모색

이라크 정부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고 나섬에 따라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무산된 러시아의 이라크내 대규모 유전개발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호시야르 시바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라크 지도부는 후세인 집권 시절 체결된 계약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이행한다”면서 정부내 담당 위원회가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러시아 석유회사인 루코일사는 이라크 서부 쿠르나-2 유전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따냈지만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로 사업착수가 안되자 이라크가 계약을 파기했다. 러시아는 이라크의 새

지도부가 모든 주요한 유전개발계약을 미국 및 서방기업들과 맺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와 이라크간) 석유와 가스 분야 협력에 대해 좋게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치안상황을 봐가면서 현재 200명인 이라크 파견 유전개발 전문가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바리 장관은 22일 루코일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 국왕 “유가 오르면 유류세 내려야”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국왕은 19일(현지시간) 석유 소비국들은 유가가 오르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둘라 국왕은 이날 리야드에서 석유장관들과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 및 에너지지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 연설을 통해 “유가가 오르면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줄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투기를 제한하고 시장의 실체를 왜곡할 수 있는 루머와 오도된 정보는 반박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가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세계시장에 적절한 양의 석유를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알리 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은 국제에너지포럼(IEF) 개막연설을 통해 석유시장의 불안정은 과도하고 부정확한 추측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타르, 美와 140억달러 규모 가스공급 합의

미국이 중동의 천연가스 대국인 카타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 기반을 확보했다. 카타르는 미국과 총 14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집션 가제트가 20일 보도했다. 카타르는 새뮤얼 보드먼 미 에너지 장관의 최근 카타르 방문 때 서명한 이 합의에 따라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25년 간 미국에 LNG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측은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70%, 엑손 모빌 측이 30%를 출자해 세계 최대인 연산 1천560만 규모의 LNG 정제공장을 카타르에 세우기로 했다. 압둘라 빈 하마드 알-아티야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이 협정으로 미국은 전체 LNG 내수의 25~30%를 카타르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국가인 카타르는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미 중부사령부 통합지휘본부를 유치하는 등 미국과는 정치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소련지역)

러시아, “이란-인도 가스관사업 참여 희망”

러시아가 이란-파키스탄-인도를 잇는 천연가스관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고 PTI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주 뉴델리에게 열린 아시아 에너지 장관 회담에 참석한 빅토르 흐리스텐코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관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러시아와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은 이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많고 리스크도 공유할 마음도 있다”면서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다른 당사국들이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흐리스텐코 장관은 특히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들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현재 기획 단계에 있는 이 사업이 실질적인 협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파키스탄-인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은 지난 1990년대 초반에 처음 제안됐으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관계로 진전을 못보다가 지난해부터 양국이 평화 회담에 나서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와 중국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공조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 가스관을 중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미국은 이 사업으로 이란에 엄청난 돈이 흘러들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인도는 최근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영국의 IIF 컨설팅을 자문업체로 선정하는 등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평화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에는 총 74억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당사국들은 오는 2007년에 착공해 2009년 완공할 예정이다.

러시아, 에너지 생산·수출 확대 계획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역에 대해 2015년까지 석유·가스 수출을 6배 늘려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8%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 증산 방침을 발표했다. 러시아 흐리스텐코 산업에너지 장관은 최근 원유는 2015년에 연 5억3000만톤을 생산, 이중 3억1000만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해 4억5870만톤의 원유를 생산, 2억5740만톤을 수출한 바 있다. 천연가스는 연간 7400억㎥를 생산하고 2900억㎥를 수출할 계획으로 지난해 5891억㎥를 생산 1484억㎥를 수출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생산 증대·수송망 구축과 함께 수출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증산 방침을 발표했다.

에너지 자원의 주공급기지인 서(西)시베리아 지역의 생산량을 지속 증대시켜 나가고 새로운 유전·가스전 개발에도 주력하고 발틱해를 경유하고 북유럽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및 국영트란스네프티社の 원유 수송 능력을 30% 증대하는 등 수송망도 확충기로 했다. 이는 유럽 지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중시하면서 대미

수출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 소비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비중은 4%에 불과한 수준이나 최근 미·러간 에너지 분야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증산 방침에는 아태지역에 대해 2015년까지 석유·가스 수출을 6배 늘려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8%로 확대키로 했다.

러 철강업체, 무산광산 개발 간접참여 추진

러시아 제3의 대형 철강업체인 OAO 세베르스탈이 북한 무산철광 50년 개발권을 따낸 중국 지린(吉林)성 통화(通化)강철그룹에 대한 지분 참여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에 있는 이 회사의 막심 쉐브스 부회장은 상하이 동방조보(東方早報)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측이 현재 통화강철측과 협상을 진행중"이라면서 "러시아측은 러시아 철광자원과 통화강철 일부 주식의 교환하는 방식의 주식 매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동방조보는 쉐브스 부회장이 세베르스탈측에서 어느 정도의 통화강철 주식을 매수하려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30% 이상을 희망한다고만 말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그는 이어 지린성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러시아측에 통화강철을 적극 추천·소개하고 통화강철측이 합작 협의가 이처럼 빠르게 진전되는 것은 의외라면서 양측은 앞으로 1개월 내에 러시아측의 일부 통화강철 주식 매수, 합자기업 설립, 러시아철광자원 공동개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베르탈은 2004년 철강 총생산량이 약 1천300만t에 이르고 판매수입이 80억달러를 넘은 세계 철강회사 순위 20위에 드는 회사로서, 금년 2월 '세계철강동태(WSD)'가 발표한 세계철강기업 경쟁력 순위에서 포

스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제5위의 강철회사와 이탈리아 제2위의 강철회사도 소유하고 있다. 지린성 최대의 국유기업인 통화강철은 앞서 중국 최대의 국유 철광석 수출입회사인 중강(中鋼)그룹 및 옌벤텐츠(延邊天池) 등 지린성의 다른 2개 기업과 공동으로 향후 50년간의 무산철광 개발권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러 “송유관 支線 건설돼도 中에 독점공급 안해”

빅토르 흐리스텐코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중국측 지선 건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지선이 건설돼도 모든 석유 수출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흐리스텐코 장관은 러시아 주간지 ‘프로필’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1단계 공사로 모든 석유 물량이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만일 그렇다면 왜 (페레보즈나야에) 원유 입출을 위한 터미널을 짓겠는가”라고 물었다. 러시아 정부는 송유관 1단계 구간인 ‘타이세트(이르쿠츠크주)~스코보로지노(아무르주)’ 공사와 동시에 송유관 종착지인 페레보즈나야만(灣)에 원유 입출을 위한 터미널을 짓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스코보로지노에서 중국 다칭(大慶)으로 지선을 연결해 3천만t의 석유를 수송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은 동시베리아 석유가 모두 중국으로 건너갈 것을 우려해왔다. 흐리스텐코는 “일본인 동료들을 만나 충분히 설명했으며 러시아가 비밀리에 어떤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측 지선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마치면 중국과 함께 최종 결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이 안돼 송유관을 통해 수송할 물량을 확보하

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는 지난 7일 크렘린에서 동시베리아 송유관을 건설하면서 중국측에 지선을 놓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흐리스텐코 인터뷰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는 등 주로 그의 방미 성과를 묻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국제환경단체, 시베리아 송유관 노선변경 요구

중국과 일본간에 치열한 경합이 벌어져온 러시아 시베리아 송유관에 대해 이번에는 국제 환경보호단체들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린피스와 세계야생동물기금(WWF) 및 국제동물복지기금(IFAW) 등은 공동 작성해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시베리아로부터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으로 송유관을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세계 최대 청정수역인 바이칼호를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송유관이 바이칼호로부터 8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을 통과하도록 돼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송유관이 터질 경우 불과 20분 안에 몇만톤의 원유가 바이칼호로 흘러들어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이는 지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바이칼호가 세계 청정수의 5분의 1 가량을 담고 있는 귀중한 천연 자산이라면서 더욱이 바이칼호와 그 주변에 최고 1천500종에 달하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유관의 종착 지점인 페레보즈나야만도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페레보즈나야만에 작은 섬들이 많아 대형 유조선이 석유 터미널에 접근하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최대 170억달러가 투입돼 이미 초기 건설이 시작된 시베리아 송유관에 대해 러시아 천연자원

부는 바이칼호에 근접해있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유네스코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유네스코와 환경단체들은 송유관이 바이칼호에서 북쪽으로 더 떨어져 통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로젝트 주관사인 러시아 석유회사 트란스네프트는 러시아 당국이 이미 허가한 '합법적' 프로젝트라면서 공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노선을 바꿀 경우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주장해왔다. 송유관 프로젝트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 힘겨루기도 여전하다.

러시아는 지난해 송유관 종착 지점을 페레보즈나야만으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에 힘을 실어줬으나 지난 4월에는 돌연 프로젝트 1단계 공사 계약을 취소시킴으로써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1단계 공사는 중국 국경에서 약 64km 떨어진 지점으로 하루 60만배럴의 원유가 공급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요 석유 소비국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두루 러시아 원유를 공급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들의 경고를 묵살해왔다.

코빅틴스크 가스전사업, 가스프롬 참여 가시화

러시아 이르쿠츠크주(州)에 위치한 '코빅틴스크' 가스전 개발을 놓고 사업권을 갖고 있는 '루시아-페트롤리엄(이하 루시아)'의 대주주 'TNK-BP'와 가스관을 쥐고 있는 국영 가스업체 '가스프롬'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동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가스프롬에 맡기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에 맞서 TNK-BP는 가스프롬 및 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점점 목이 졸려오는 형국이다. 일간 '브레마-노보스티'는 9일 천연자원부가 TNK-BP측에 내준 면허 요건을 바꿀 의향이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무자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 6월 우리 트루트네프 천연자원부 장관은 루시아의 코빅틴스크 가스전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이를 가스프롬에 넘기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TNK-BP가 충족해야 할 요건은 내년까지 90억^m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인데 회사측은 러시아 정부가 해당 물량을 전부 내수용으로 공급하라는 규제를 달고 있다고 밝혔다. TNK-BP는 90억^m 물량이 이르쿠츠크 주변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은 만큼 한국이나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TNK-BP는 최근 정부와 원만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가스프롬이 루시아의 지분 일부를 매입할 것을 제의했다. 경제 주간지인 '피난스' 최신호에 따르면 TNK-BP의 알리스터 퍼거슨 부사장은 가스프롬이 루시아의 주주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가스프롬 자회사인 '가스엑스포르트'와 판매 및 수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TNK-BP는 자신이 갖고 있는 루시아 지분은 놔둔채 가스프롬이 인테로스, 이르쿠츠크 주정부가 보유한 루시아 지분을 매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스관이 절실한 TNK-BP로서는 가스프롬이 코빅틴스크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협력을 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일정 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루시아에 대한 지분은 TNK-BP가 62.42%로 가장 많고 인테로스, 이르쿠츠크 주정부가 각각 25.82%, 10.7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르쿠츠크 주의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현재로선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네프티는 지난달 인테로스로부터 이르쿠츠크에 소재

한 '베르흐네츠크네프테가스' 지분 25.94%를 매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로스네프티 보다는 자금력과 가스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정부 지원이 많은 가즈프롬이 결국 러시아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즈프롬은 현재 코빅틴스크 사업에 어떤 관심도 표명하지 않고 있어 TNK-BP의 속을 태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즈프롬이 50%가 넘는 러시아 지분을 원하고 있으며 결국 TNK-BP는 코빅틴스크 사업권을 가즈프롬에 내놓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유가 부작용으로 러시아 성장 둔화”

러시아는 고유가로 인해 막대하게 유입된 석유대금이 루블화 강세를 초래함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이 약화되고 경제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1일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러시아 경제 상황에 관한 정기보고서에서 이런 성장세 둔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 추세를 보면 이런 성장둔화는 루블화의 급격한 강세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 때문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올들어 3분기까지 루블화 가치가 7.3%나 올랐음을 지적, 지난 1998년 정부의 디폴트선언 이래 루블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산업경쟁력상의 이점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경고했다.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선언 이후 유가급등에 힘입어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격한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경제성장률이 2003년 7.3%에서 작년 7.1%로 둔화됐으며 올해는 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 추세변화는 2012년까지 러시아의 경제규모를 두배로 확대하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

령의 목표치를 흔들어놓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러시아의 경제관료들은 이런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되려면 7%이상의 연간 GDP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달러가격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올해 9개월간 수입은 28% 증가했으며 기계류 수입은 40%까지 치솟았다.

풍부한 에너지 세계가 주목하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초 벨기에 브뤼셀 방문당시 “러시아는 에너지를 전략무기 카드로 쓰지 않겠다”고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확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가운데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기반으로 러시아는 새로운 도약의 뱃 고동을 울리고 있어 주목된다. 러시아의 에너지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의 석유생산과 수출국(1일 950만 배럴 생산·650만배럴 수출)·천연가스 생산과 수출에서 1위(연 5900억㎥ 생산 확인 매장량 전 세계매장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역시 독일·프랑스·이탈리아·헝가리·폴란드·터키 등 최소 27%에서 최고 68%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1200만명의 인구가 생활하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모스크바강(80여 km)이 지류를 따라 흐르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을 설계했던 엔지니어가 모스크바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스크바시는 전기를 이용한 버스와 유연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 넘쳐나고 있지만 유럽풍의 건축구조로 단독주택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 아파트로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고층건물은 천연가스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고려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방식은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LNG) 생산국인 러시아는 세계 가스매장량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세계의 에너지 안정화에 따른 원료공급기지로 가스와 관련된 산업이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스 산업은 정부 예산 중 20% 이상의 외화수입과 약 25%의 조세수입을 보장할 수 있어 러시아경제의 가장 확고하고 효율적인 산업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천연가스는 약 8000만명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 42% 이상이 전력용, 66%는 난방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정책은 석유는 수출용, 가스는 국내 소비사용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스생산량의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 총 가스생산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총 가스생산량은 6410 억㎥로 증가했고 이 중에서 난방용 연료생산이 50%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해외 사용분은 2020년도까지 7300 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스산업의 발전 속도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가스생산량의 86%를 세계적 국영가스회사인 가스프롬사가 채굴했고 약 14%는 독립 가스생산회사와 연합석유 회사가 채굴했으며 2020년까지 독립 생산회사들의 채굴량이 20%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시아에 매장된 가스채굴권의 55%를 러시아 국영의 가스프롬사가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회사들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 가스매장량에 대한 권리는 특정회사로 국한하고 있다. 약 47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서부와 동부·극동·카라해·바렌쯔해·오호츠크해 사주는 주요가스 매장지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지역)

블레어 총리 “새 원전 건설 검토”

유럽에 원자력 발전소 논란이 새롭게 일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지난달 29일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블레어 총리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에너지 공급은 위협받고 있고 기후변화는 긴박감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내년 여름 발간할 정책백서에 이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집권 보수당 내부는 물론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론자들은 원전 사고, 원전에 대한 테러, 핵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은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폐쇄 정책을 추진해온 나라다. 오는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1개만 남기고 모두 폐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블레어 총리가 기존 정책을 번복하는 발언을 내놓았으니 영국은 물론 유럽이 뒤집힐만도 한 일이다.

유럽은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 독일, 스웨덴 등은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은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모두를 해체하기로 했다. 스웨덴은 지난 1980년 국민투표를 실시해 원자력 발전소 12개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반면 프랑스, 핀란드 등은 추가 건설을 추진중이다. 전체 전기생산의 80%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오는 2012년 새 원자력 발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핀란드는 오는 2008년 5번째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들어가며, 6번째 건설을 검토중이다. 이런 와중에 원자력 발전소 폐쇄 행보를 걸어왔던 영국의 총

리가 정책 번복을 선언함으로써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수 밖에 없게 됐다.

BP 청정에너지 개발 주력

영국 석유업체인 BP가 청정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선다. BP는 'BP대체에너지'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향후 3년간 18억달러(약 1조8천700억원)를 풍력, 태양력, 수소발전, 고효율 가스발전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향후 10년간 이 분야에 대한 BP의 투자계획은 80억달러. 정확한 투자 규모는 향후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 상황, 정부 지원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하지만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이 분야에서 향후 10년내에 6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다. 이 같은 BP의 방침은 온실가스 유발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세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동종 업계로의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존 브라운 BP 최고경영자(CEO)는 "이들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신기술 개발 및 상업성 확보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BP는 태양열에너지 분야가 매년 30%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BP는 이 같은 자사의 노력이 석유기업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미끼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BP의 가스, 전력, 재생에너지 담당 최고경영자인 비비안 콕스는 기자들과 만나 "이 분야는 사업성이 좋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저(低)탄소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회사의 연간 투자예산 150억달러의 거의 대부분은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 '기업이미지 개선용'이라는 환경단체 등 반대론자들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당장 세계 최대 석

유회사인 엑손모빌도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들의 돈을 하찮은 용도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블레어,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확대 촉구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19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에 이로운 신기술 개발에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블레어 총리는 이날 인디펜던트지 기고문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모든 주요 당사자들이 동시에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국가는 행동하고 일부 국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석탄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모두가 동참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레어 총리는 이어 지구는 교토의정서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등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협약에 서명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목표를 달성하면서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와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다자적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럽 온난화 주범은 수증기

유럽의 날씨가 더워지는 것은 이산화탄소보다는 수증기 탓이 크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세계복사센터(WRC)의 롤프 필리포나 박사 등 연구진은 지구물

리화학보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온실효과로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습도가 높아지고 높은 습도가 다시 기온 상승을 낳게 된다면서 이는 잠재적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의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유럽 전역에 산재한 연구 네트워크와 기상관측소들을 통해 기온과 습도, 그리고 온실효과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장파(長波) 복사를 측정한 결과 1995~2002년 사이에 유럽 지역에서 지표면에 내려앉는 장파 복사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태양광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장파 복사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수증기 등 지표면에 도달한 뒤 태양광을 흡수하고 나서 대기층을 뚫고 반사되는 기체 분자들로부터 나오는 파장이다.

필리포나 박사는 “우리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지표면의 기온 상승 때문인지, 즉 올라가는 복사량이 많아서 내려오는 양도 많아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런 환경을 설정하고 증가된 구름의 영향까지 추가했으나 장파 복사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의 원인이 부분적으로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지만 기온 상승의 70%는 수증기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유럽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 1995~2002년 사이에 동부 유럽 국가들은 기온이 섭씨 2도 상승, 서유럽 지역에 비해 더 급속한 온난화 현상을 나타냈다. 연구진은 이것이 건조한 이베리아 반도 때문에 수증기 증발이 제한되는 서유럽과의 습도 차이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트해 연안국, 러-독 가스관 환경재해 우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국이 러시아와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관 건

설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가스파이프라인이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자원을 매개로 한 유대강화에 기여하는 이면에 발트해 연안국가와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가스의 수급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문제제기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3일 뉴스통신사 발틱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따르면 발트3국 지도자들은 에스토니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스관 통과예정 해역에 다량의 화학무기들이 버려져 있는 점을 지적, 재앙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건설 도중에 혹시라도 실수로 화학물질이 유출된다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했다.

아놀드 루텔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발트해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이 화학무기로 오염된 상태”며 “그중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선박과 함께 침몰해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럽연합(EU)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가스관 건설은 해당 국가에 지극히 중요한 문제지만 EU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발다스 아담쿠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말했다. 루텔 대통령은 “일반인들에게도 이 문제를 깊이있게 주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과학자들 역시 개입돼야 한다”며 “건설 계획에는 발트해 연안국과 EU 국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억유로(약 5조원)가 소요될 독일-러시아 가스관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양국 정상간 합의가 이뤄진 당시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비판론이 제기됐으나 양국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송유관은 러시아 가즈프롬, 독일 이온 등 양국 에너지기업들과 함께 화학제품업체 바스프의 자회사 윈터살이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미주지역)

美, 석유절약 입법 착수

미 상원에 석유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인 에너지 절약 법안이 제출됐다. 공화·민주 양당이 이례적으로 적극 보조를 맞춘 법안에 대해 진보쪽인 환경단체는 물론 기독교 원리주의 세력을 비롯한 보수 진영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혀 무난한 입법이 예상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조 리버맨, 에번 베이 두 상원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석유 소비를 10년 안에 하루 250만배럴 줄이고 2031년까지는 감소폭을 1천만배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을 공개했다. 미국은 현재 하루 2천만배럴 이상의 석유를 소비하며 상당 부분이 자동차 운행용이다. 미국인이 소비하는 석유의 근 3분의 2는 수입으로 충당된다. 이들 의원은 “에너지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면서 “외국에 석유를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회를 통과한 중합에너지법안에 석유 소비를 하루 100만배럴 줄이는 내용을 첨부하려고 했으나 공화당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잇단 허리케인 피해 등으로 휘발유 값이 한 때 갤런당 3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고유가의 심각성이 급부상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해 결국 공화당도 석유절약 입법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새로 제출된 에너지 절약 법안에는 이밖에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 제조업체에 대한 최고 35%의 세금 유예와 하이브리드카 구입자와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 대해서도 세금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자동차 중량을 줄이는 연구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도 적극 지원하도록 돼있다. 환경단체는 이 법안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환영했으며 보수 진영의 경우 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보불안 해소 측면을 적극 지지했다. 미국 매파들은 갈수록 반미 성향이 강해지는 중동에 석유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왔다.

美 동절기 천연가스 가격급등 우려

천연가스선물시세가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멕시코만 생산시설 복구 지연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고가를 지속하고 있어 올 겨울 수요기의 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가격 인상에 의한 비용상승으로 산업용 수요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중순 멕시코만 천연가스의 감산량이 보통 생산량의 60~70%에 상당하는 하루 60억ft³ 발표해 전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가격은 허리케인 피해이래 공급부족이 우려돼 급등했다. 9월말에 한해 1BTU당 14달러대를 비롯,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월 선물 중가는 지난달 17일 현재 13달러대였지만 4달러였던 2003년 가을에 비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T&C코즈믹의 마쓰모토 사장은 “천연가스는 액화해 운반하거나 보존하거나 하지만 미국은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혹한이 계속된 외에 경기확대로 산업용 수요가 높아져 천연가스의 가격구조는 최근 2,3년 사이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하고 가격급등 배경에 장기적인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우존스 통신에 의하면 에너지 분석가들은 가격급등으로 산업용 가스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 겨울 공급은 수요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생산시설의 복구가 예상보다 늦어진다거나 겨울철 기온이 평년을 밑돌면 공급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스생산회사인 업계단체, 미국가스협회는

지난달 11일 생산하락으로 올 겨울 천연가스평균 가격이 50%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에너지省도 올 겨울은 난방비가 급등하고 특히 가격인상이 급격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가정은 전년보다 부담이 350달러인 약 4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화학메이커 등의 기업은 가격급등에 강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제조업자협회(NAM)는 최근 천연가스 가격급등이 제조업자의 최대 위협요인이 됐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제조업자의 일부가 생산거점용 천연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베네수엘라 정유시설 추가 건설 합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정부가 브라질 북부 페르남부코 주에 이어 남부 파라나 주에도 대규모 정유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국영석유회사를 통한 공동투자 방식으로 파라나 주에 20억~30억달러 규모의 정유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는 페르남부코 주도인 레시페 시 인근 지역에도 25억달러 규모의 정유시설을 공동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사절단을 이끌고 베네수엘라를 방문 중인 로베르토 레키앙 파라나 주지사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으로부터 정유시설 투자 약속을 확인받았다”면서 “이밖에도 27개 분야에서 1억1천500만달러의 통상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 3월 말께 파라나 주를 방문해 정유시설 공동건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레키앙 주지사는 덧붙였다. 베네수엘라는 브라질과의 석유 공동개발을 확

대하기 위해 현재 브라질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20개 주정부와도 개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日, 베네수엘라 천연가스 개발권 획득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일본 내 3위 석유개발업체인 데이코쿠(帝國) 석유가 공동으로 베네수엘라 천연가스 개발권을 따냈다고 브라질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트로브라스와 데이코쿠 석유는 이날 1천950만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천연가스 유전 ‘모루이-2’ 블록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페트로브라스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최근 실시한 유전 개발 국제입찰에서 데이코쿠 석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권을 받았다”면서 “이번 입찰에는 브라질, 일본 외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대거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 열린 입찰에서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개발 기업인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과 미국의 셰브론이 각각 1천500만~2천500만달러 규모의 개발권을 얻었다. 석유 수출 세계 5위인 베네수엘라는 국내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베네수엘라간 에너지 공동개발 계획에 따라 베네수엘라 내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